

2021 하반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 확립을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 연구기관

오늘의 세계경제 · 세계경제 포커스 · KIEP 기초자료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차례 contents

발간일	제목	저자	
2021.07.01.	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민수 외	01
2021.07.01.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연원호	02
2021.07.02.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	김규판	03
2021.07.07.	중국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과 전망	조고운	04
2021.07.07.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PO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예진	05
2021.07.09.	바이든 행정부의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검토 결과 및 시사점	윤여준 외	06
2021.07.09.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예상준 외	07
2021.07.12.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분쟁의 정치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정민지	08
2021.07.15.	EU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오태현	09
2021.07.16.	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	장영신 외	10
2021.07.21.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이천기 외	11
2021.07.22.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장영욱 외	12
2021.08.04.	아프리카 코로나19 백신 공급 현황과 시사점	강문수 외	13
2021.08.17.	카자흐스탄 경제 분석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 방향	정민현 외	14
2021.08.19.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장영신 외	15
2021.08.20.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권율 외	16
2021.08.25.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오윤미	17
2021.08.30.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	김정곤 외	18
2021.09.08.	APEC CBPR 운영 및 논의 동향과 시사점	박은빈 외	19
2021.09.28.	2021년 독일 총선 분석과 전망	이현진	20
2021.10.06.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김승현	21
2021.10.07.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장영욱	22
2021.10.13.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업데이트)	예상준	23
2021.10.22.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이예림	24
2021.11.11.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안성배	25
2021.11.12.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전망	민지영	26
2021.11.15.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박혜리 외	27
2021.11.23.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정형곤	28
2021.11.26.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김규판	29
2021.11.30.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문진영 외	30
2021.12.09.	2020~21년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	김다울 외	31
2021.12.24.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32

# 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민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장 (mshan@kiep.go.kr, Tel: 044-414-1153)

김수빈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sbkim@kiep.go.kr, Tel: 044-414-1228)

이진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jinhee@kiep.go.kr, Tel: 044-414-1183)

- ◎ [개요]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은 2021년 6월 11일부터 13일(현지 시간 기준)까지 영국 콘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G7은 전 세계 인구의 10.1%, GDP의 45.5%를 차지하는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간 협의체임.
  -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 이어서 올해에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우리나라 외에 호주, 인도, 남아공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함.
- ◎ [정상합의문의 주요 내용] 참여국 정상들은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 참여국간에 공유된 의제(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라는 합의문을 발표함.
  - 코로나19 이후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을 참여국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G7 협의체 차원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비전을 제시함.
  - 합의문은 △보건(Health) △경제회복과 일자리(Economic Recovery and Jobs)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Free and Fair Trade) △미래를 향한 개척(Future Frontiers) △기후와 환경(Climate and Environment) △성평등(Gender Equality) △국제사회의 책임과 공동의 행동(Global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Action)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됨.
- ◎ [시사점]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바이오·녹색 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 내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향후 전염병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요구됨.
  - △인권 △민주주의 △포용성 등의 가치 중심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내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관리자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Tel: 044-414-1022)

## ◎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안정적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쌍순환 전략과 함께 혁신주도형 성장을 위해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대 인프라(교통·수자원) 투자를 위한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을 내놓음.
- 양신일중 정책 중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기지국, 산업 IoT, AI 및 데이터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 인프라 투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함.

## ◎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한 반도체 수지 적자 확대와 △미국의 견제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불과하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음.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서는 HiSilicon과 SMIC 등이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고 있음.

## ◎ 이에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① 국가전략 ② 국가 반도체 기금 ③ 커창반(科創板) ④ 세제지원 등을 활용하고 있음.

-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는 반도체를 중점 과학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특히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약점이 되고 있는 설계 소프트웨어(EDA), 고순도 소재, 중요 제조장비 및 제조기술, IGBT, MEMS, 첨단 메모리 기술, SiC 및 GaN 등 3세대 반도체 개발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 제2기 국가 반도체 기금이 2019년 10월부터 29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하였으며, 중국판 나스닥인 커창반도 2019년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자금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음.
- 2020년 8월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세제 지원책을 발표하고 2021년 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감.

## ◎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역량 강화에 나선 가운데 △우리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대비 △인재유출 방지 및 적극적인 인재확보 △전략적인 R&D 투자로 비교우위 분야의 초격차 유지와 새로운 선도적 핵심 기술·공정(choke-point) 개발이 중요한 시점임.

-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은 아직 낮아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한국, 일본, EU와의 국제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큼.
-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협력기회 활용과 동시에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강화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무한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상 필수불가결한 핵심기술(choke-point)을 선점하기 위한 R&D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

김규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keiokim@kiep.go.kr, Tel: 044-414-1017)

- ◎ 금년 6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스가(菅義偉) 내각이 반도체 전략을 ‘성장전략’에 담아 각의결정함.

  -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24일 민관합동의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서플라이체인 안정화 관점에서 반도체전략 수립을 논의
- ◎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반도체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의 재생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의 국제전략 추진으로 구성됨.

  - 일본정부는 가장 큰 약점을 세계 유망의 파운드리 부재로 보고, 국내 반도체 소재·제조장치 산업의 강점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외국의 첨단 파운드리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방향 선회
  - 일본정부는 포스트 5G 네트워크의 보급 확산 등에 따른 디지털화 관련 반도체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차세대 첨단 로직 반도체의 설계·개발에 주목
  - 일본정부는 반도체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파워반도체와 광전자 반도체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
  - 일본정부는 외국 파운드리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대부분 노후화된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신·증설한다는 방침
  - 일본정부는 반도체 기술유출방지에 유념하면서 국제전략으로서 미국, 대만, 유럽 등 동맹국과 협력하여 이노베이션과 안정적 공급 확보를 도모한다는 계획
- ◎ 이번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다소 ‘방어적’ 요소가 강하지만 집권 자민당이 추진 중인 경제 안전보장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집권 자민당은 금년 6월 경제안전보장전략 수립을 목표로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를 설치하였고,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을 제정한다는 계획
- ◎ 일본이 ‘반도체전략’을 통해 과거 1980년대 반도체 ‘왕국’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경제산업성이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의 성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금년 2월 대만 TSMC가 차세대 3D 패키징 기술 연구개발 센터를 일본에 설립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 초에는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하는 등 일본은 외국의 첨단 파운드리 유치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
- ◎ 금년 반도체전략은 일본 국내 반도체 공급망 우선 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제조장치 기업들이 일본정부 의도대로 국내 공급망만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가 다수임.

  - 다만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정책 심화에 따른 미·일 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능성과 일본정부의 외국 첨단 파운드리 유치전략의 향배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주요 변수임.

# 중국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과 전망

조고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kucho@kiep.go.kr, 044-414-1145)

- ◎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식의 법정화폐로서 유동 중인 현금(M0)의 범주에 속하며, 개인과 기업의 소액·소매결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고 6대 국유상업은행 등 지정운영기관이 개인·기업에 태환해주는 이중 운영체제로 운영되며, ‘1화폐-2데이터베이스-3센터’ 구조를 통하여 인민은행의 중앙관리가 이루어짐.
  - 디지털 위안화는 은행계좌나 인터넷 연결 없이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민은행을 제외한 기관은 개인정보를 볼 수 없어 ‘통제된 익명성’이 보장되며, 개인정보 등록 수준에 따라 거래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 특징임.
  - 디지털 위안화는 개인에게 새로운 소비지급결제 수단의 제공 및 금융 포용성 증대 효과를, 기업에게 기업간 지불 신뢰 보장을, 정부에게 통화·재정정책의 효과 제고를 가능하게 하며,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 보급되더라도 현금이나 제3자 지급결제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위안화는 2030년 기준 중국 본원통화의 6%, 사회 전체 소비(소매결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이나 제3자 지급결제의 일부를 대체한 후 공존하는 방향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내에서 시범지역 간으로 지역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 중국 전역 및 글로벌 범위로 더욱 확대되고 시범 추진속도 또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중국당국은 4+1 시범지역(선전(深圳), 쑤저우(苏州), 송안신구(雄安新区), 청두(成都)+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장소)을 시작으로 10+1 시범지역(‘4+1’+상하이·하이난·창샤·시안·칭다오·다렌)으로 시범지역 범위를 확대해왔음.
  - 최근에는 시범지역 내뿐만 아니라 시범지역 간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테스트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의 범위를 더욱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전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 유력한 전망대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사용된다면 시범사업 지역 및 테스트 범위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것임.
- ◎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 국경간 결제 시스템 구축은 아직 테스트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이며,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디지털 위안화의 국경간 결제 사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홍콩·태국·아랍 에미리트의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M-CBDC Bridg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SWIFT와 중국인민은행 산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음.
  - [M-CBDC Bridge 프로젝트] 국경간 결제에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중간 단계를 축소하고 실시간·동시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높은 비용 △복잡한 절차 △불투명성 등 SWIFT 기반의 기존 국경간 결제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SWIFT와 공동으로 합작법인 설립] 중국인민은행은 합작법인을 통한 SWIFT와의 협력 강화를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 촉진 및 글로벌 사용 경험 축적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디지털 위안화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소매결제를 중심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경간 결제 등 거액·도매 거래의 추진과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는 디지털 화폐기술이 성숙하고 활용도가 제고됨에 따라 장기적·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 향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 국경간 결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정책 체계의 마련 △프라이버시 침해 및 디지털 감시 우려 해결 △중국당국의 자본통제로 인한 위안화 국제화 한계 극복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PO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예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imyj@kiep.go.kr, Tel: 044-414-1116)

- ◎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POPIA: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의 유효기간이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로 모든 조항에 관한 실질적인 준수 의무가 부여됨.
- ◎ POPIA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준, 정보책임자의 책임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임.
  - [적용 대상] GDPR은 정보주체를 살아 있고 식별 가능한 자연인으로 보나 POPIA는 법인도 정보주체로 포함함.
  - [적용 범위] POPIA는 남아공 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관해 법률을 적용하나 GDPR은 역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EU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 있는 정보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법률을 적용함.
  - [처벌] 법률을 미준수할 경우 GDPR은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으나 POPIA는 이를 범법행위로 보고 구속형도 부과할 수 있음.
  - [정보책임자의 책임] GDPR과 POPIA 모두 정보책임자(컨트롤러) 및 정보처리자(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의 기밀보장 의무 준수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POPIA의 경우 이에 대한 입증 및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책임자에게 있음.
- ◎ POPIA와 GDPR 간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이미 GDPR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들은 POPIA를 용이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1년 7월 1일부로 POPIA가 전적으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아직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해석과 감독 기관(IR)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GDPR의 해석 및 적용 사례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 POPIA에 저촉하지 않기 위해 남아공의 주요 교역국에서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규제의 수렴을 통해 아프리카의 교역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관된 규제의 부재는 국별로 상이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함.



# 바이든 행정부의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검토 결과 및 시사점

윤여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yoonyj@kiep.go.kr, Tel: 044-414-1166)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044-414-1193)  
 임지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wrim@kiep.go.kr, Tel: 044-414-1273)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Tel: 044-414-1086)

- ◎ 본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간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 ◎ [반도체] 특정 지역(아시아)에 편중된 취약한 공급망 구조로 인해 원료 공급 또는 제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증폭될 수 있으며 미국기업들의 대중국 매출 비중이(전체 매출의 36%) 높아 미중 갈등에 따른 대중 반도체 판매 감소 리스크도 존재
  - 또한 제조공정의 복잡화, 공정 분리,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인해 악의적인 공급중단에 따른 리스크 및 중국에 의한 반도체 IP 침해 이슈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
- ◎ [배터리] 원재료 가공 및 배터리 팩 수입에 있어 높은 대중국 의존도가 주요 리스크 요인
  - 중국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제한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의 전 세계 생산량 중 60%와 80%를 가공
  - 한편 미국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43%를 차지
- ◎ [핵심 광물] 미국이 수입하는 핵심 광물 중 상당 부분이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도가 높으며 해당 산업의 쇠퇴에 따른 연구개발 및 생산인력 감소 현상 역시 극복해야 할 문제
- ◎ [의약품] 오프쇼어링의 확대, 특정국가(중국, 인도)에 생산이 편중된 공급망 구조는 지정학적 변화나 자연재해 등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 의약품 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갑작스런 공급망 충격에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 ◎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맞춘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또한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설비 증설 관련 투자 확대 및 R&D를 통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 배터리와 같이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놓인 제품에 투입되는 원료 광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





#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예상준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jyea@kiep.go.kr, Tel: 044-414-1157)

오택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발전되어 온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의 디지털세 논의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이하 ‘디지털세’로 통칭)을 논의함.
- OECD/G20 IF에서 2019년 이후로 논의된 디지털세 구상은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Pillar 1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통해 국가간 조세 경쟁을 막는 Pillar 2를 골자로 함.
- 디지털세 논의와 별개로 2018년부터 유럽 내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하자, USTR(미 무역대표부)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 부과로 대응하였고, 이후 디지털세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짐.
-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재건 계획의 자원 마련을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그 결과 디지털세 논의가 빠른 진전을 보임.

◎ 6월 4~5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7월 1일 OECD/G20 IF 제12차 총회에서 130개국이 합의한 디지털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G7: [Pillar 1]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액과 이익률 기준 상위 다국적기업(the largest and most profitable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초과이익(=글로벌 매출액의 10%를 상회하는 이익)에 대해 20% 이상 과세할 권리 (Amount A)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함.
- OECD/G20 IF 제12차 총회: [Pillar 1] 적용대상기업, 과세연계점, 배분량, 매출귀속 기준, 사업구분, 조세확실성, 일방주의적 조치, 이행 계획의 구체화 등; [Pillar 2] 기본 체계, 적용대상기업, Pillar 2의 지위, 이행, GloBE 규칙 (소득산입규칙과 비용공제부인규칙), 원천지국과세규칙, 실효세율 계산,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 단순화 등; 올해 10월까지 해결해야 할 중요 쟁점으로 최저한세율 확정 문제가 남아 있음.

◎ 디지털세 합의안이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합의 결과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 조세 분쟁 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 파악이 필요함.

-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주도로 디지털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르면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BEPS 합의안 도출 이후 국내 세법의 개정과 양자간 조세조약 개정 등 관련법 개정,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에 대비한 전문가 역량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BEPS 합의안 이행 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법인세율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임.
- 또한 법인세율 이외 제도와 규제 요소가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분쟁의 정치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mijeong@kiep.go.kr, 044-414-1225)

- ◎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주에서 2020년 11월 분쟁이 발발하여 현재까지 정세가 안정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인 학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식량안보가 악화됨.
  -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총선이 연기되면서 에티오피아 정부와 야당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간 갈등이 종족 갈등으로 심화되어 전면전이 발생
  - TPLF와 갈등 관계인 암하라족 및 인접국 에리트레아도 에티오피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분쟁이 격화됨.
  - 분쟁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 조직적 성폭력 등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로 간주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증가
  - 에티오피아는 현재 기근(famine)에 처한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하며, 에티오피아 및 에리트레아 정부군이 교전 전략 차원에서 티그라이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고의로 차단한다는 논란이 있음.
- ◎ 국제사회는 △ 티그라이 전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허용 △ 인권침해 중단 및 관련자 문책 △ 에리트레아군의 철수 △ 모든 분쟁 당사자 간의 휴전을 촉구해왔으며, 대응의 강도를 점차 높임.
  - 미국은 에티오피아 및 에리트레아를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경제·군사 분야 원조를 중단하였고, EU도 에티오피아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대에리트레아 제재를 부과함.
  - G7 외교장관, UN사무총장 및 UN안전보장이사회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EU와 미국은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함.
- ◎ 정세 불안으로 총선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였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였으며, 아프리카의 뿔 지역(Horn of Africa)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세 불안으로 인해 전체선거구의 20%를 제외한 채 총선이 실시되어(6.21) 선거 결과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는 여당이 압승하였으나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이 우려됨.
  - 공여국의 원조 삭감에 따른 국가 재정 여력 약화 및 정세 불안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 에티오피아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으며, 투자 유인이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감소할 수 있음.
  - 난민 및 영토분쟁 문제로 에티오피아-수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권침해 문제로 에리트레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에티오피아 경제에 의존하는 지부티의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 ◎ 모든 분쟁 당사자가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에티오피아 내 정세 불안 및 인도적 위기는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에티오피아 정부가 휴전을 제안했으나 TPLF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에티오피아 정부를 지원했던 암하라족 및 에리트레아의 이해관계도 달라 실질적으로 휴전에 돌입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 티그라이 분쟁은 그동안 존재하던 종족 간 갈등이 무력충돌로 표출된 것으로, 티그라이 내 정세가 안정되더라도 추후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음.
  -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아직 티그라이 전 지역에 대한 접근도 허용되지 않음.
  - 현재 에티오피아의 제조업, 건설업 등의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ODA 사업들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에티오피아의 정세 안정은 한국에도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한국도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정세 안정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EU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 ◎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편중으로 인해 주요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미국은 전자설계자동화(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및 핵심 지재권(Core IP), 설계(로직, DAO), 장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은 조립·포장·시험 부문에 강점이 있는 한편, 유럽은 전자설계자동화 및 핵심 지재권, DAO(개별반도체, 아날로그, 기타), 반도체 장비 등에서 제한적인 경쟁력이 있음.
- ◎ EU는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에서 EU의 점유율 확대(현행 10%→20%)를 목표로 1,4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新산업정책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 유럽의 공동이익에 관한 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 on Common European Interest)’에서 반도체는 배터리 및 수소경제와 더불어 중요한 프로젝트로 선정됨.
  - EU는 ‘European Initiative on Processors and Semiconductor Technologies’를 통해 향후 2~3년간 1,450억 유로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 확대계획을 발표함(’20. 12).
  - ‘2030 Digital Compass’를 통해 EU는 반도체 생산목표를 재확인하고, 전 방위적인 투자와 함께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발표함(’21. 3).
  - EU 新산업정책을 통해 반도체를 6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분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동맹 결성 및 국제협력 강화 발표함(’21. 5).
- ◎ EU는 생산역량 강화 차원에서 우수 반도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안을 포함한 추가적인 EU 반도체 전략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유럽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TMicroelectronics는 EU가 구상하고 있는 반도체동맹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입장으로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 역시 이미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재로서는 EU 내 생산설비 구축계획은 없다고 발표함.
- ◎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면서 EU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 설계나 제조장비 기술분야에서 한·EU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

장영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장 (ysjang@kiep.go.kr, Tel: 044-414-1263)

김소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kse@kiep.go.kr, Tel: 044-414-1335)

- ◎ 2021년 6월 7일 중국 충칭시에서 아세안-중국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s)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됨.
- ◎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사회·문화, 정치·안보 부문에 걸쳐 △협력관계 수준 격상 △경제협력 강화 △보건협력 강화 △‘남중국해행동강령(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COC)’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 등을 논의함.
- ◎ 아세안-중국의 이번 특별외교장관회담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보건협력을 기반으로 양측의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반면, 협력관계 수준 격상, COC 협상에 있어서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으며, 미얀마 사태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ISEAS의 「동남아시아: 2021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3년 연속 중국이 뽑혔으며, 아세안 지역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국가로 전체 응답자 1,032명 중 44.2%가 중국을 선택하여 일본(18.2%), EU(10.3%), 미국(9.6%)과 큰 격차를 보임.
  - 한편 미국과 중국 중 선호 국가를 물어보는 양자택일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38.5%에 그쳤는데, 특히 높은 비율로 미국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국가는 필리핀(86.6%), 베트남(84%) 등 남중국해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으로 나타남.
- ◎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경제협력·보건협력 플랫폼 호환성 강화 △호혜성과 포용성 제고 △미·중 갈등하에서 아세안의 중립적 파트너로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성격 강화 필요성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주요 이니셔티브인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와 보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물론 중국 對아세안 정책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보건협력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패권주의 가속화로 바라보는 아세안의 시각이 여전한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이 표방하는 호혜성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쿼드 견제를 위한 중국의 對아세안 협력관계 격상 요구, COC 협약 체결 요구에 대한 아세안의 미온적 태도를 감안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외교안보 환경하에서 아세안의 중심성(centrality)과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독립적인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됨.

#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이천기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leeck@kiep.go.kr, Tel: 044-414-1361)

박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jhpark@kiep.go.kr, Tel: 044-414-1136)

박혜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044-414-1029)

##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입법안을 발표함.

-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2025. 12. 31) 동안 EU 수입업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담하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부담해야 함.
- CBAM은 EU 내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역외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무역조치의 성격을 띠며 따라 WTO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두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
- 최종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이유로 부과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제1조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며, EU는 GATT 제XX조 환경예외를 원용함으로써 CBAM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 ◎ CBAM 입법안의 대상 산업범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었으나, 철강(HS72)의 모든 하위산업과 철강제품 일부 품목(73류 일부)까지 포함되면서 철강산업에 집중됨.

-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 규모는 31.5억 달러로 CBAM 대상품목의 대EU 수출에서 95%를 차지하며, 주력 철강 수출품목(HS7210, HS7208, HS7219)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음.
- EU ETS 무상할당은 2026년부터 10년에 걸쳐 축소·철폐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철강이 적용받는 CBAM 인증서 감면 혜택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EU ETS 무상할당으로 인한 단기적인 CBAM 인증서 감면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CBAM으로 인한 탄소비용을 EU 수입업자가 수출기업에 일부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 ETS 무상할당의 점진적 축소에 따른 철강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 CBAM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EU ETS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는 2026년을 기준으로 CBAM의 이행 및 확대 적용에 대비한 기업과 정부의 단계별 대응전략이 필요함.

- 수출기업은 CBAM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함.
- 정부는 중기적으로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CBAM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탄소 관련 DB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국내 탄소감축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EU ETS의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한 국내제도 보완이 필요함.
- 정부 및 산업·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탈탄소화 정책을 EU에 충분히 설명하여 CBAM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논리 마련이 요구됨.

#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함.

-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
- 본 입법안 패키지는 향후 회원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 본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 철강, 화학 등에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고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 에너지조세지침, 재생에너지지침 및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을 통해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탄소흡수원 확대] 토지이용 및 삼림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순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상향
-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를 금지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목표 제시
-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 신설 -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경제 및 사회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노동자, 지역 공동체가 없도록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의 지원대책 마련

◎ 한국은 향후 10년간의 탄소감축 목표를 재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구조전환에 따르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법안 입법 필요
- 친환경 전환에 따르는 소외 지역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한국판 뉴딜 2.0의 한 축으로 제시된 '휴먼 뉴딜'을 공정 전환과 명시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고려 가능
-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입·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아프리카 코로나19 백신 공급 현황과 시사점

강문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kangms@kiep.go.kr, Tel: 044-414-1204)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mijeong@kiep.go.kr, Tel: 044-414-1225)

박규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ktpark@kiep.go.kr, Tel: 044-414-1293)

- ◎ [백신 공급 현황]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률은 다른 대륙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이마저도 모로코, 남아공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그동안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백신 공급을 코백스 퍼실리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계적인 백신 공급 물량 부족으로 모로코,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국가의 백신 확보율이 매우 낮음. 특히 모로코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가 아프리카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등 아프리카 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8월 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1차 접종률은 2.5%에 불과함.
  - 최근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백스 퍼실리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아프리카 백신 취득 태스크팀(AVATT)이라는 단일 창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아공, 이집트 등은 백신 위탁 생산을 개시함.
- ◎ [백신 조달 및 접종 지연 요인] 코백스 퍼실리티 등 외부에 대한 높은 의존성, 취약한 정부 거버넌스, 냉장보관 및 운송 시스템 미비 등의 요인이 백신 접종 지연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동안 선진국의 코로나19 백신 독점 및 공급 부족으로 백신을 공급받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인도정부가 코비실드 백신 유출을 규제하면서 백신 접종이 지연됨.
  -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조달되더라도 국내 거버넌스 체계, 냉장시설 부족, 열악한 운송체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백신 접종이 지연되거나 백신을 폐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사헬 G5, 모잠비크 북부, 에티오피아 북부 등)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조달이 지연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백신 접종도 크게 지연되는 형국임.
- ◎ [시사점] 코로나19에 취약한 저소득국, 취약국 등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신 공급망 구축, 백신 보관을 위한 냉장시설 확충 등에 대한 협력이 요구됨.
  - 최근 들어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3차 유행과 함께 사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코로나19 백신 조달 및 접종 지연은 아프리카 보건의료 지표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구입비용과는 별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만 3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아프리카 내 백신 냉장 운송, 백신 보관을 위한 냉장시설 등 기초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분쟁취약국의 백신 조달 및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되며, 난민, 취약국 국민을 위한 방역물품 등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의료용품공급플랫폼(AMSP)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방역물품 조달 등 아프리카 내 의료용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의료기기 조달 시장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성취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면제 등 다양한 장애 요소를 극복해야 하므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함.

# 카자흐스탄 경제 분석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 방향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Tel: 044-414-1128)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 ◎ 2021년 8월 16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포스트코로나 시기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모색이 필요함.
- ◎ [경제 현황]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성장 관점에서 생산성(TFP)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qualitative growth)이 필요한 시점임.
  - 생산성의 성장 기여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중·고부가가치 제조업(mid- and high-tech manufacturing)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가 절실한 상황임.
- ◎ [2050 전략]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제 확대 △고급 인적 자원 육성 △경제 개방 △제도 혁신을 골자로 하는 ‘2050 전략’을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로 추진
  -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방안은 △중소기업 적극 육성 △교육·기술 투자 확대 △제조업 발전 △디지털화를 통한 조세행정 효율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 [한·카자흐 협력 방향] 카자흐스탄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설계한다면 협력의 효과 상승 및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수요를 반영한 주요 사업 분야로 △디지털·보건 등의 신산업 협력 △교육(인적 자원)협력 △행정·운송 인프라 협력 등을 들 수 있음.
  - [신산업] 디지털·보건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 협력이 유망하며, 이를 위해 △기초지식 및 적정 기술의 이전과 공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교류 등의 협력 사업이 필요함.
  - [교육] 고급 인적 자원 육성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 및 학생 교류 제도화 △인적 자원 관리체계 노하우 공유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 등의 협력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야함.
  - [인프라] 행정 및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전자정부 시스템 △국토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 사업이 필요함.

#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장영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장 (ysjang@kiep.go.kr, Tel: 044-414-1263)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 ◎ 2021년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미국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사 이익(mark-up)을 크게 늘렸고,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농민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우려가 있음.
  -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쟁당국(FTC, DOJ)뿐만 아니라 농림, 산업, 국방, 보건, 에너지, 노동, 교통, 주택 등을 관장하는 10여 개 이상 부처들에 72개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whole-of-government effort)을 강조함.
- ◎ 6월 25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 해당 패키지 법안은 총 5개의 개별 법안이 묶인 형태인데, 이는 GAFA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미국정부의 이번 경쟁촉진 행정명령 발표와 반독점법 패키지 법안 발의는 향후 미국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규제 강화의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기존 경쟁정책의 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미국의 경쟁정책 변화는 행정적 조치와 입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국내 경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음.

  - ‘효율성’, ‘소비자 후생’, ‘미시적 효과’ 중심의 경쟁법 집행 패러다임이 ‘공정성’, ‘포용’, ‘사회적 후생’, ‘거시적 효과’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원리를 확산하고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 추세 강화로 인해 향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시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사업자가 친경쟁적 효과를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같이 디지털 경제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미국의 경쟁촉진 행정명령에서는 경쟁법 집행 강화와 함께 산업별로 경쟁제한적 사전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독과점 시장구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전적·시장친화적 접근방식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권 올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ykwon@kiep.go.kr, Tel: 044-414-1060)

최장호 세계지역연구센터 통일국제협력팀장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유애라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전문연구원 (ailayoo@kiep.go.kr, Tel: 044-414-1239)

최유정 세계지역연구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 ◎ 최근 북한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자발적 국가검토(VNR)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화상으로 북한의 VNR 보고회를 개최함.
  - 북한은 VNR 보고서를 통해 유엔의 SDGs 이행을 위해 세부목표 95개와 132개 지표를 채택하고, 북한 인민경제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농업·에너지·물·환경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명시함.
  - SDGs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SDGs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촉진, SDGs 모니터링 및 과제 제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양자·다자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 ◎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국경봉쇄가 지속되고,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보건위기가 가중되면서 북한의 SDGs 이행은 사실상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해 그동안 유엔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기아, 보건, 에너지, 해양 및 토양 생태계 등의 분야는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식수 위생 및 토양생태계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SDGs 이행을 위한 통합적 접근 차원에서 유엔은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 지원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고해 왔음.
-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대북 ODA 지원은 양자원조보다는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기구차원에서 보건 및 아동, 식량,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왔음.
  - UN OCHA의 인도지원 통계에 의하면 2015~20년 기간 북한에 지원된 인도적 지원액은 대략 2억 4천만 달러이고, 전체 인도적 지원사업의 80% 수준을 유엔 기구에서 집행하고 있음.
  - 상위 사업시행기관 중 WFP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 비중이 49%로 가장 크며, UNICEF가 23%, WHO가 5%를 차지함.
-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 SDGs 이행과 목표달성을 위해 다자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남북협력을 보완한 다자방식의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모색할 시점임.
  - 북한 역시 SDGs 이행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신뢰성 있는 추진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므로,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합 SDGs를 공동으로 수립하고 유엔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엔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유엔개발그룹(UNDG)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정 체결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분야별 신탁기금 설립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 ◎ 글로벌 반도체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EU,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은 코로나19 및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단기적 반사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국의 반도체 자주화 움직임에 따른 위협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고 산업의 비교우위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 대만의 반도체 전략은 반도체 산업의 △제조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기존의 강점을 유지·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의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대만 반도체 산업은 선진 장비·소재, 화학품, 소프트웨어, IP 등의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중 간 무역 마찰 및 기술 경쟁,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등 통상마찰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자급력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대만전자장비협회에 따르면 2020년 대만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의 자급률은 각각 1%, 15%에 불과함.
  - 이에 대만은 대내적으로 고급 인재의 육성·확보,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글로벌 장비·소재 기업의 대만 투자유치를 확대해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
  - 특히 대만은 자주적 산업 생태계 및 안정적 공급망을 역내에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및 신설, 첨단 기업 리쇼어링, R&D 보조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국내외 고급 인재 육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
  - 향후 대만은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미래 반도체 및 핵심 장비·소재 분야의 기술 관련 신규 우위 및 경쟁력 확보에 더욱 집중할 전망임.
- ◎ 다만 대만은 반도체 관련 기술, 산업, 인재, 자금 등의 조치를 각 부처별로 지속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조치는 5년 단위의 단기 계획 위주이고 실행계획 및 집행일정, 성과평가 등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적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 한국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 추진에 따른 한국·대만 간 경쟁 심화 및 기회 확대의 영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소재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시장 내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나 소재·장비의 국산화 및 전량 대체는 기술 난이도로 인한 소요시간 및 수준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공급선 다변화 측면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은 K-반도체 전략의 세부 과제 추진에 있어 대만이 TSMC, UMC, ASE 등 자국의 대표 반도체 대기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산학연 연계 고급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음.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

김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jgkim@kiep.go.kr, Tel: 044-414-1093)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Tel: 044-414-1042)  
 손성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Tel: 044-414-1266)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Tel: 044-414-1086)  
 백중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Tel: 044-414-1323)  
 장윤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yhjang@kiep.go.kr, Tel: 044-414-1330)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김민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kmh@kiep.go.kr, Tel: 044-414-1257)

◎ 미국의 철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한 관리 역할을 중국 등 인접국이 맡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철군은 미·중 갈등하에서 더욱 촉진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던 자원을 동아시아 등지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정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 세력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의 확산을 막고, 주변 정세 안정 및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탈레반 세력에 협력과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탈레반 및 인접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프가니스탄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부 민간 차원의 탈레반 지원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음.
-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는 한편, 국경지역에서 탈레반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은 인도 견제를 위해 탈레반을 지지하고 있으나, 탈레반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함께 안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 인도는 중국-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3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에 대응하고 무장 독립단체 세력 확대 저지를 위해 러시아-이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및 인접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대외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UN, 국제인권감시단과 같은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정상화 노력에 공조하여 인권 보호, 테러 확산 및 마약 유통 방지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
-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상황에서 국제적 힘의 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외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바,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APEC CBPR 운영 및 논의 동향과 시사점

박은빈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전문연구원 (ebpark@kiep.go.kr, 044-414-1046)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kgang@kiep.go.kr, 044-414-1196)

- ◎ APEC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증 메커니즘인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2011년에 마련하였으나, APEC 회원국의 가입률 저조로 최근 CBPR을 非APEC 국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APEC CBPR은 회원국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개발된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 제도로, 이는 2004년 APEC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APF)’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됨.
  - 창설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2021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9개국(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이 APEC CBPR에 가입하였고, 그중 5개국에 인증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3개국만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의 인증률이 저조한 편임.
  - 현재 APEC 회원국에 한하여 CBPR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APEC 심의를 통해 가입이 결정되나, 미국은 CBPR을 APEC으로부터 독립시켜 CBPR 회원국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규제 수준이나 보호 범위 등이 상이하여, APEC은 CBPR을 국경간 데이터 이전의 글로벌 메커니즘으로 상호운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CBPR이 국경간 정보 이전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임을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음.
  - 한편 GDPR의 경우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적절한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기업으로의 이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CBPR보다 높은 요건으로 인해 상호운용 논의가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결된 USMCA, SADEA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국제 원칙과 지침으로 APEC CBPR 인증체계가 포함되었으며, 데이터 국외 이전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CBPR을 인정하고 있음.
- ◎ APEC CBPR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를 글로벌 대표 인증체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APEC 차원의 다양한 부문에서 역할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CBPR 인증기관인 KISA는 2021년 하반기 중에 CBPR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CBPR을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체계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재는 CBPR-BCR의 상호운용성 논의를 위한 APEC 내 비공식회의가 중단된 상태이나, APEC CBPR이 하나의 인증 메커니즘으로 GDPR에서 인정 받기 위해 상호운용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CBPR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제도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는지 혹은 CBPR에 반영되지 않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요소들을 CBPR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국경간 정보 이전에 있어 국내법에 상응하는 혜택을 인증 기업들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USMCA, DEA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국제기구의 원칙과 지침 중 하나로 APEC CBPR을 규정하고 있듯, FTA 및 디지털무역협정 등에 APEC CBPR을 포함함으로써 글로벌 대표 인증 체계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독일 총선 분석과 전망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 ◎ 2021년 9월 26일 제20대 독일 연방하원의회(Bundestag)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사민당이 기민/기사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확고한 지지층의 감소로 양당 선두체제에는 변화가 불가피
  - 총선 결과 제2투표(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은 사민당(25.7%), 기민/기사당(24.1%), 녹색당(14.8%), 자민당(11.5%), 독일대안당(10.3%), 좌파당(4.9%) 순이며, 득표율이 5%에 미치지 못한 좌파당 역시 연방하원 입성에 성공
  - 총 의석수는 735석으로 2017년 총선 대비 26석 증가했으며, 사민당 206석, 기민/기사당 196석, 녹색당 118석, 자민당 92석, 독일대안당 83석, 좌파당 39석, SSW 1석을 확보
- ◎ 이번 총선은 △위드 코로나 연방선거 △메르켈 이후 양대 정당간의 격전 △녹색당의 성쇠 △법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투표 참여 등이 특징적
  - 연방 차원의 첫 위드 코로나 선거로, 우편을 이용한 사전투표율이 증가했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성행
  -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간 박빙이었으나, 정치적 인지도가 높은 솔츠 총리후보를 내세운 사민당이 승리
  - 여론조사상 녹색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때 최선두를 달렸음을 감안할 때 총선 결과 '3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녹색당으로서는 총선 사상 최대 득표율
  - 연방선거법의 개정으로 법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 처음으로 연방총선에 참여
- ◎ 사민당 중심의 연정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협상 난항으로 연방정부 구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 존재
  - 사민당이 총 206석으로 최다의석을 차지했으나, 과반석(368석) 확보를 위한 선택지는 협소한 편
  -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신호등 연정' 혹은 기민/기사당과 대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정부가 구성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신호등 연정' 협상이 성공할 경우, 연방차원에서는 통일 이후 최초의 다당 연정 내각이 형성

#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 ◎ [선거 결과] 2021년 9월 29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岸田文男)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10월 4일 개최된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제100대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됨.
- ◎ [주요 내각 인선] 기시다 총리는 총리 지명 후 코로나19 대응 등 이전 내각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가면서도 아베노믹스 궤도 수정, 소득 재분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
  - [경제] 기시다 총리는 아베노믹스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아소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을 비롯,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3인을 전원 교체함.
  - [경제안보] 후보 시절 기시다는 전략물자의 확보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으며, 자민당 내 경제안보 협의체인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에서 논의를 주도한 고바야시(小林鷹之) 전 방위성 정무관을 경제안보 담당 장관으로 임명함.
- ◎ [정책 전망] 정권 초기에는 경제·외교 분야에서 이전 정권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아베노믹스 궤도 수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 노선은 계승한다는 점과 임기 초 중요 선거들이 있다는 점, 코로나19 대응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정권 초기에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외교] 마·일 동맹을 중시하는 이전 정권의 노선을 대체로 승계하면서도 일부 친중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함.
  - [경제안보] 자민당 내부에서 진행되던 경제안전보장전략 논의를 정책적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신임 총리가 주장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정비·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 ◎ [경제안보]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논의할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입법화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 [한·일 관계] 현재로서는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기시다 총리가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용의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 ◎ 방역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함.
  -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약화와 거듭된 변이의 출현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
  - 장기전에 대비하여 감염 통제보다 고위험군 보호 및 중증환자 치료에 자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
  -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유행상황이 안정적이고 방역으로 인한 활동제약이 적었던 편이나, 의료진,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일부에 피해가 집중되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
- ◎ 해외 주요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음.
  - [영국] 2021년 7월 19일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 [서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접종자 위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백신 패스 도입
  -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감염 확산을 감수하며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 [싱가포르] 가장 전향적인 바이러스와의 공존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고강도 조치 재도입
  - [호주] 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 고강도 조치 유지 중
- ◎ 주요국은 비용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일정 수준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노력으로 경제적 타격은 지난해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방역체계 전환이 늦은 나라는 경제회복 속도도 감소하는 경향
- ◎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연령별 백신 접종률, 유행상황, 의료체계 대응, 감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 10월 중 성인의 90%가량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나, 고위험군 미접종자 100만 명에 대한 접종 독려 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
  - 경제회복이 부문별, 노동형태별,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에 적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
  - 변이 출현 감시 및 저소득국 팬데믹 대응 지원도 안정적인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

#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업데이트)

예상준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jyea@kiep.go.kr, Tel: 044-414-1157)

## ◎ 2021년 10월 8일 개최된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 제13차 총회 결과 디지털세 Pillar 1과 Pillar 2에 관한 최종합의문이 도출됨.

- OECD/G20 IF에 참여하는 140개 회원국 중 136개국이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였으며, 지난 7월 도출된 합의안에 반대하였던 헝가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가 입장을 바꿔 합의에 동참함.
- 최종합의문은 지난 7월 도출된 합의안을 발전시킨 내용으로, Pillar 1과 Pillar 2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정을 나타낸 본문과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부속서(Annex)로 이루어짐.
- 2022년까지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과 모델 규칙(Model rules),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 등이 개발될 예정이며, 각국의 법령 및 제도 개정,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Pillar 1과 Pillar 2가 시행될 계획임.

## ◎ 최종합의문에서 결정된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 [Pillar 1] Amount A 배분량을 초과이익의 25%로 결정; 분쟁 방지 및 해결 메커니즘의 적용에 있어 대응 역량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우대; 디지털 서비스세를 비롯한 일방주의적 조치의 폐지방안과 도입 금지시한 명시
- [Pillar 2] GloBE 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15%로 결정;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9%로 결정; 실질적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공제비용 명시; GloBE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세 관할 내 최소 기준 매출액과 이익에 대한 결정; 해외 진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유예
- [이행계획에 관한 부속서] Pillar 1의 Amount A와 Amount B, Pillar 2의 GloBE 규칙과 원천지국과세규칙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과 메커니즘 실행 시한에 대한 합의 내용; 2022년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단, 비용공제부인규칙의 발효는 1년 유예).

## ◎ 최종합의문은 2021년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합의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이 제도화와 비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법과 제도의 발효 이후로도 국가간 공조와 과세 정보의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

이예림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연구원 (yrlee@kiep.go.kr, Tel: 044-414-1068)

- ◎ **우주는 국제 공유지로서 다수의 국가들이 인공위성, 우주왕복선 등을 발사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이 존재함.**
  - UN의 우주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외기권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조약’, 1972년 ‘우주손해 배상조약’, 1976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84년 ‘달조약’ 등이 있으며, 1959년 창설된 외기권위원회(COPUOS)는 우주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우주 개발이 최근 민간 주도로 변하면서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진입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뉴스페이스란 주로 정부가 주도했던 중앙집권적 우주산업을 민간 투자 파트너와 기업이 주도하면서 분권화되는 새로운 흐름을 말함.
  - 최근에는 테슬라(Tesla Motors)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Amazon)의 제프 베이조스, 버진그룹(Virgin Group)의 리처드 브랜슨 등 억만장자들이 각각 스페이스X(SpaceX), 블루오리진(Blue Origin),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 등의 자회사를 통해 우주산업에 진출하면서 뉴스페이스를 개척해나가는 양상을 보임.
- ◎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우리나라 역시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함.**
  -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함.

#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책임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kiep.go.kr, Tel: 044-414-1190)

## ◎ 2022년 세계경제는 2021년보다 1.3%p 하락한 4.6%(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글로벌 대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환 비용 부담과 정부 예산 제약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의 병목·지체 현상 △국제협력 지체와 국내 정치과정의 지연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흐름은 주요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민간부문의 회복이 지속되겠지만, 애초 계획보다 축소 통과된 인프라투자 법안 규모, 중간선거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책 지연 및 축소,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 우려 등 하방요인으로 연간 3.8%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봉쇄조치 완화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 증가,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으로 각각 2022년 연간 4.6%와 5.3%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 일본은 IT 업종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ESG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중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신흥국에서도 완만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델타 변이의 재확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2022년 성장세를 결정지을 전망

- 중국은 산업규제로 인한 민간부문 위축,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부진, 부동산 기업의 잠재적 디폴트 리스크, 미·중 갈등 재점화 등 경기 하방요인이 있으나, 안정된 경기 정상화를 이루면서 2022년 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인도는 백신 접종인구 확대, 글로벌 경기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2022년 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2022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진 후 서서히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2022년 연간 5.2% 성장할 전망

- 러시아는 민간 소비와 투자의 빠른 회복 및 견조한 유가 흐름, 환율 안정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브라질은 물가 불안에 따른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과 대선을 앞둔 불확실한 정치 상황 등으로 2022년 1.5%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판단



#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전망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044-414-1095)

- ◎ 세계 4대 탄소배출 국가인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러시아는 2019년 기준 세계 4대 탄소배출 국가로 전 세계 배출량의 4.6%를 차지하며, 기후변화성과지수(CCPi) 2021에서 총 61개 국가 중 52위를 기록함.
  - 2019년 기준 러시아가 EU에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의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EU가 CBAM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CBAM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6년 러시아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4억 4천만 유로이며, 2035년에는 18억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됨.
  - 이에 러시아 주요 기업은 정부보다 빠르게 자체적인 기후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국 내 정책 및 제도가 미비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러시아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1992),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 등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는 있으나, 국내 제도 도입 현황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2021년 7월 「온실가스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되었으나, 이 법은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할 뿐 적극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음.
  -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되고 있으나, 대체로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저탄소 인증서 도입, 탄소단위 등록부 생성 및 유지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초기 제도 형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10월에 채택된 ‘장기 발전전략 2050’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나, 실제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따라 수밖에 없으며, 점진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가 강제력을 갖는 제도를 순조롭게 도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임.
- ◎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탄소 흡수량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새로운 한·러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에너지 효율성 제고기술 및 관련 상품 개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탄소 흡수량을 확대하기 위한 삼림자원 활용방안, 기후변화 대응정책 연구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쓰레기-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 저탄소 농업 개발 등 연관 부문에서의 협력도 가능할 것임.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박혜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044-414-1029)

박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jhpark@kiep.go.kr, Tel: 044-414-1136)

- ◎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 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CBAM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됨.
- ◎ CBAM에 대한 중소기업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평가한 결과 산업별로 취약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라 탄소감축 지원,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역량 강화 지원 등 가장 적합한 대응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함.
-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5,806만 톤, 간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8,333만 톤이며, 직·간접 수출을 모두 고려할 때 탄소비용 부담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가공 산업임.
  - 철강가공 산업은 CBAM 대상품목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높기때문에 신속한 CBAM 대응과 피해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하고, 기업당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석유 산업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함.
- ◎ 현재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한 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 CBAM 자문기관’ 신설,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반’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 중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 주도 탄소중립 정책 △중소기업의 환경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사업 △저탄소화를 위한 ICT 활용 또는 디지털 전환 지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 제도 및 프로젝트 확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임.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정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hgjeong@kiep.go.kr, Tel: 044-414-1127)

- ◎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
  -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
  -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음.
  -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고,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음.
- ◎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
  -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
  -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
- ◎ 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
  -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음.
- ◎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
  -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 필요
  -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
  -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 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 관리 필요
- ◎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
  -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히 중국 기술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임.
- ◎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간 공급망 구조 강화 예상
  - 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음.
  -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 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
  -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
  -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
- ◎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외 반도체 공장 입지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에 의한 반도체 전문대학원 신설 필요
  -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이바, 벤치마킹할 필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김규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keiokim@kiep.go.kr, Tel: 044-414-1017)

- ◎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
  -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 2021년 10월 내각관방 ‘경제안전보장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직 신설,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각료회의) 개최 등 경제안전보장 추진 체계를 정비·강화
  - 일본의 정부부처들도 2022년도 예산안요구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제안전보장 관련부서 신설을 요구
- ◎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은 경제책략, 국내 공급망 강화대책, 쿼드(QUAD) 공급망 구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경제책략]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경제책략’을 답습하여 수출 통제, 기술수출 통제, 외자규제 강화,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강화, 정부조달 금지와 관련된 조치들을 단행 중
  - 일본정부의 경제책략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나, 2019년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본은 언제든지 수출 통제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현 기시다 내각은 경제책략 중에서도 기술수출 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간주수출 통제 강화, 특허의 공개 제한,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 신기술 수출 통제 등 4가지가 핵심 쟁점
  - 일본의 기술수출 통제 강화는 우리 기업이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일 간 특허분쟁 마찰 소지가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지원정책에 주력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는 반도체, 첨단 배터리 등을 전략물자화하는 데 중점
  -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금 설치와 반도체·배터리의 국내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임.
  - 일본의 반도체 전략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 관점에서는 회의적이지만,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와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시책은 우리정부와 기업이 눈여겨보아야 할 분야
  - [쿼드 공급망 구축 협력] 쿼드 4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희토류, 5G·반도체의 공급망 확보방안은 그 방안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
-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중(對中) 견제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법률의 기본 이념이 시장경제 원칙과 WTO 규범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일본정부는 특허의 공개 제한,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중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 중



#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문진영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장 (jymoon@kiep.go.kr, Tel: 044-414-1274)

이성희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leesh@kiep.go.kr, Tel: 044-414-1234)

- ◎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하였으며,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하였음.
  -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mitigation)목표의 추가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 등의 기초를 반영함.
  - 메탄과 같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점진적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지속가능한 산림 및 토지 이용,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각국 정상들의 선언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
- ◎ 기후재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선진국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 조성에 실패하면서 이번 총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규모는 최근 4년 평균 7,220억 달러로 추정되며, 선진국은 2019년 기준으로 796억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하면서 기존 공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조성이 필요함.
  - 선진국은 COP26을 앞두고 향후 재원 공여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면서 2023년까지는 공약한 1,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번 협상에서 선진국은 기존의 재원 조성 의무를 재확인하였고,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 설정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 우리나라는 이번 당사국총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당사국총회 평가] 국제 탄소시장을 포함한 파리협정 이행규칙이 완성되었고, 감축 목표와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그간 주목받지 못한 개도국의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설정] 탄소중립은 더 이상 정치적인 선언이 아닌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향후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감축 여력이 높은 개도국과 협력하기 위해 협력대상국과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함.
  - [기후적응사업 확대 대비]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기회를 모색해야 함.
  - [기후재원 집계 기반 마련] 보다 체계적으로 기후재원을 집계하고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0~21년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

김다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dwk129@kiep.go.kr, Tel: 044-414-1070)

이정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jkrhee@kiep.go.kr, Tel: 044-414-1084)

- ◎ 본고는 2020~21년 북한의 대외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종전선언, 다자협력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동북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 [대내외 환경] 2020~21년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협력을 중단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
- ◎ [대외 동향] 2020~21년 북·중 관계는 ‘전략적 밀월관계 강화’, 북·러 관계는 ‘인도적·외교적 지원’, 북·미 관계는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초변화’로 요약할 수 있음.
  - [북·중 관계]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북·중 간 전략적 밀월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상호간에 외교적 지지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중단된 가운데 무역을 재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함.
  - [북·러 관계]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과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건의하는 등 인도적·외교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북·미 관계]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북한은 ‘선(先) 적대시정책 철회, 후(後) 대화’를 고수하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의 대북정책 기초에 변화가 생김.
- ◎ [대외관계 방향 및 시사점] 북한의 대외관계는 큰 틀에서 현재의 기초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추세’와 ‘종전선언 성사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북한이 기존의 방역기조를 유지하여 관광 등의 인적 교류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제한적으로 북·중 무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
  - 북·중 간 전략적인 친선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베이징 올림픽의 평화적 활용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으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으나 종전선언 여부에 따라 영변핵시설 폐기보다 낮은 수준의 협상(‘Very Small Deal’)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음.

#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044-414-1124)

- ◎ 2021년 12월 17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에 본 자료에서는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사회·복지 △디지털·혁신 분야에 관한 협의를 진행함.
  - [경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자원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사회·복지] 한국 정부는 △교육 △보건·의료 △도시개발 등의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발 및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디지털·혁신] 양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디지털경제,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국은 ICT, 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총 7건의 MOU와 2건의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회담 성과가 도출되었음.
  - 양국이 의회 및 정부부처 간 신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 채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상원에 한국 협력 전담 특별위원회 설치, 투자대외무역부에 한국 전담 차관직 신설을 약속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점은 고무적임.
-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기존 제조업, 농업,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 및 확대하고, 에너지, 자원 등 신규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은 감염병,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D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빈곤퇴치, 교육 및 의료 역량 강화, ICT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바, ODA 사업을 통한 상호호혜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